

남북정상회담이후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 북·일 수교협상을 중심으로 -

김진호*

I. 남북정상회담과 일본

남북정상회담은 남과 북에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실현하고, 남북경협과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정상회담을 전후로 하여 북한이 보여준 유화적인 태도를 감안할 때, 특별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정치적 의의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통하여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했다는 데 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은 일정 부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함으로써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남북한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 봉쇄정책을 폐기하고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 화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도 내부 사정을 타파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포기하고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변 4국의 이해와 협조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지만, 주변 4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남북당국 간 대화의 의의는 자못 깊다고 하겠다.

본 논문과 관련시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일본의 외교정책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 여파는 대략 3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북·일 국교정상화교섭에의 영향이며, 두 번째는 일본의 안보정책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경제 재건을 둘러싼 경제지원과 민간 비지니스의 활성화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북·일 교섭 재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일본인 납치의혹이 걸려있는 만큼 설령 주변국 가운데 일본만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꺾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안보정책 가운데 대북 견제가 큰 비중을 차지해온 점이다. 미·일 신 방위 협력지침 관련법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나 공작선 침투 등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그러나 남북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가 진행될 경우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존재의의에 대한 의문제기나 앞으로 논의될 유사법제의 약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이번 남북회담을 예상 이상의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¹⁾ 특히 공동

* 제주대 교수

1) 일본 정부는 앞으로 남북 공동선언이 구체화되면 일본의 안보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000년 6월 16일 보도했다. 일본은 그러나 이번 선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단숨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견해는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신중히 지켜보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의 사토 겐(佐藤 謙) 사무차관도 2000년 6월 15일

선언의 내용 가운데 앞으로 일본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 있다면 경제적 측면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만간 투자나 경제진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본은 신중한 자세로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작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란 남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이해관계국들간의 냉전적 적대관계와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 지역에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로 가는 길에 있어서 주요한 이정표의 하나는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이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 초의 탈냉전 조류를 타고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형성해온 소련(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및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외교적 고립 속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첨예한 적대관계를 형성해온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연 역사적 사건으로서 향후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의 개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그 동안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의 개선에 장애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가능성은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의 하나를 제거했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정상간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비록 북한과 한·미·일 공조체제간의 핵심적인 쟁점사안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의 해결책을 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대외정책이 유화정책으로 전환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북한이 북·미 협상과 북·일 협상에서도 유연한 타협 자세로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남북정상회담이후 일본의 한반도정책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일본은 기대 반, 우려 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메이지 이래 일본은 한반도를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왔다. 한반도가 타국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감행해왔고, 패전 후 단절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수교협상이 한국의 대일청구권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 타결의 가닥을 잡게 된 데에도 소위 '부산 적기론(赤旗論)'이라는 안보논리가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에 일본의 마지막 남은 전후 처리문제를 완결 짓기 위해 북·일 수교 협상이 열렸다가 중단된 것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안보문제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²⁾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에서 남북 합의와 관련,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까지나 방위력의 기반적인 정비'라며 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따른 방위력 삭감론을 견제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은 그 동안 북한의 위협을 상정해 구축해온 것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법의 성립도 지난 98년 8월의 미사일 발사와 작년 3월 괴선박 영해침범 사건 등 북한의 위협이 배경이 됐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전돼 한반도의 통일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주한미군의 철수 논의로 먼저 주일미군 존재의 당위성에도 영향을 주게 될은 물론 최근 논의가 활발한 유사법제에도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일본과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는 1일 북한이 자국내 핵 시설에 대해 국제사회의 핵사찰을 받기로 한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성 관리가 말했다. 이 관리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

불 때,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유화노선으로의 전환 기미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일 것이다. 정상회담 직후 일본정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그 동안 중단되어 온 북·일 수교 협상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북·일 수교 협상 재개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일본정부의 일각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미국과 일본이 깊은 관심을 보여 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에 혼동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또는 그동안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하여 진행되어 온 미·일 안보동맹의 강화나 일본 방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불 때 북·일 수교협상의 중요성이 저하되어 일본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교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동북아 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불 때 일본의 군비확장과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일본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보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위협론의 명분 약화로 일본의 방위계획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자의 우려는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일 수교 협상의 진전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진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투명한 해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북한은 이 문제가 일본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 북한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보장받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외 협상카드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영향력 자원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본정부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북·일 수교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북·일 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일 교섭의 진전은 북·미 교섭의 진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협력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북일 수교협상을 진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얼마나 유연한

太)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이 이날 데사이 앤더슨 KEDO 사무총장과 만나 KEDO가 핵사찰 문제에 관해 "확고한 태도로 북한에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촉구하고 "경수로 핵심 부품의 인도가 조만간 이뤄질 시점에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에 응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는 앤더슨 사무총장이 야마모토 차관의 의견에 공감함을 표시하고 북한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양측이 이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KEDO의 경수로 건설작업이 착실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현재 북한의 자체 핵발전소 건립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지난 94년 협정에 따라 KEDO의 북한 내 경수로 건설 비용의 4분의 1을 분담하고 있다. 한편 앤더슨 사무총장은 경수로 건설현장 내 현지 인부들의 임금을 2배 이상으로 올려 달라는 북한측의 최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2월 2일자 문화일보.

3)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5일 평양에서 개최됐으나 양측은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한 채 첫날 회담을 끝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측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한 반면 일본은 배상은 곤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의 중단,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대표인 다카노 고지로(高野幸二郎) 대북 담당 대사는 이에 대해 일본과 북한이 식민 통치기간 중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일본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북한에 배상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일본의 한 관리가 전했다. 문화일보 2000년 4월 6일자 문화일보.

자세로 협상에 임하느냐에 따라 북·일 수교협상은 타결될 것이고, 이는 북·미 수교와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과 일본 사이의 수교 전망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난 1970년 3월에 민항기 요도호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간 일본적군과 테러리스트들을 북한이 반드시 일본으로 돌려보내거나 최소한 북한에서 추방해야 하고, 북한에 의해 납북됐으리라고 의심이 가는 일본 사람들을 일본에 돌려보내야 일본 국민이 북한과의 수교에 동의할 것이므로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쉽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정세가 동아시아 전체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를 재촉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빠르게 커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중국이 남한의 권고에 응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 정상회담을 받아들일도록 설득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커졌다고 보는 그들은 중국이 중국적으로는 남한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내다보았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뚜렷함을 읽을 수 있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그 성과인 6·15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냉전구조가 남아 있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정세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 동안 중단되어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도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감을 표현하면서 북한에 대해 수교협상 재개를 촉구할 것임을 밝혔다.⁴⁾ 그러나 다른 한편 6·15 공동선언에 미국과 일본이 깊은 관심을 보여온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미·일 공조체제에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나아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일 수교협상의 중요성이 저하되어 일본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교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본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현상유지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올 동북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는 않는다. 북한체제의 안정적 지속 속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아가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 동북아 국제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한다면, 일본의 안보 현안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일본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의 진일보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한반도의 현상 유지 속에서 긴장완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성과이며, 이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 당국의 유화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는 향후 북·일 수교협상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징조로 받아들일만 했을 것이다.⁵⁾

4)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주한 일본대사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이후 한·일관계’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회에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상 북한과 수교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북·일 관계정상화는 역사적 소명”이라면서도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안보문제와 인도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는 일본 국민감정상 수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데라다 대사는 “북·일 양국은 지금까지 10차에 걸쳐 수교교섭을 벌였으나 지금까지는 각자의 입장 개진에 불과했다”며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10월 제3국의 수도에서 진행될 11차 교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라다 대사는 이어 “남북대화가 진전될수록 북·일간의 국교정상화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는 투자협정 등 경제교류의 기반확충이 필요하며 대중 문화 개방 등 문화분야에서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0년 9월 8일자 문화일보.

5)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이 번영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두 번 다시 국제사회로부터

한편 일본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이 급진전될 경우 대북관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 1990년대 초에 북한이 북·일 수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외교적 고립의 심화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5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아냄으로써 난관에 빠진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가치는 경제적 지원에 있었던 것이고,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일본과는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쟁점이 없기 때문에 수교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탈냉전으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기존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적 외교로부터 상대적으로 벗어나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제대국 일본이 정치대국으로 부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사의 족쇄였다. 특히 인접국 북한과의 전후처리 문제의 미해결 상태는 일본외교의 도덕적 리더십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일본은 이 기회에 전후처리 문제를 완결 짓고, 재편되는 동북아 신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자국 안보에 직결되는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북·일 수교 협상은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결렬되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이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고 있지만, 북한은 이 문제가 일본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외 협상카드인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영향력 자원으로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한국의 경제협력을 이끌어내어 심각한 경제난을 끄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지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일본정부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북일 수교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북·일간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북·일 교섭의 진전은 북·미 교섭의 진전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이를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또한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재건을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협력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북·일 수교 협상을 진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고립돼 전쟁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일 동맹관계를 토대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근린 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일 안보 체제가 한층 유효하게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치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대화 협력도 강화하겠다. 오키나와(沖縄)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게 가장 중요한 2국 관계의 하나다. 올 가을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회 등을 통해 중국이 국제 사회 속에서 한층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겠다. 일본과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한(對韓) 관계의 중요성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관계를 유지 강화해 내년의 월드컵 공동 개최와 양국 국민 교류가 성공을 거두도록 한국과 손을 잡고 노력하겠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지난 해 남북한 정상 회담 등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계속해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북일 수교 교섭에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 또 북한과의 인도적 문제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해결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 유사 법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여당의 견해를 충분히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 연합뉴스 5월 11일.

III. 북·일 수교협상의 쟁점과 전망

북·일 수교 협상이 다시 재개될 경우 주요 쟁점은 다음 4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북한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 부당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일본정부의 최고책임자가 공식 사죄하고, 그 내용을 외교관계 설정을 위한 공식문서에 명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문제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 시 한일공동선언에서 전향적으로 해결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보상 또는 청구권 문제이다. 북한은 조선인민혁명군과 일본군간에 교전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쟁배상을 요구하고, 전후 45년간에 대해서도 일본이 6·25전쟁에 개입하고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보상할 것을 주장한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태도를 바꾸어 넓은 의미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만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항일 빨치산 활동은 국제법상 교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 개념을 인정할 수 없으며, 전후 45년간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인해 일본정부도 어느 정도 타협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⁶⁾

셋째는 일본인 납치의혹 사건 문제이다. 이 문제로 인해 일본 국민들의 대북 감정이 악화되어 수교협상 재개의 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이나, 1999년 12월 일본의 초당파 정당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수교협상 재개에 합의할 때, 이 문제를 일본인 처 자유왕래 문제 및 대북식량지원 문제 등과 함께 적십자회담에서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고, 북한 당국도 이 문제 해결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문제이다. 일본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가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이 문제는 일본과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 문제가 북·일간에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그러한 한에서 북·일 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앞지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북·일 관계 정상화 카드를 사용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북한이 이를 자신의 체제유지 보장의 신히로 받아들일 때, 북·일간에는 명분과 실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수교협상이 급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북한이 동북아 국제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가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IV. 잠정적 결론

북한은 과연 변하고 있는가. 텔레비전을 통해 국제사회에 새롭게 부각된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는 본질과 일치하는가. 북한이 어느 시점에 가서, 예컨대 남한의 경제지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남한과의 교류가 북한사회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판단될 때, 남북관계의 진전에 사실상 제

6) 북한이 수교의 대가로 요구하는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일본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그들은 분석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80억-100억 달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대체로 30억-50억 달러로 잡고 있다.

동을 걸려고 하지는 않겠는가.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남한측 인사들의 발언은 믿을 만한가. 남북통일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가. 북한과 관련해 일본이 장차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나 등이다. 이러한 물음에 암시되어 있듯 일본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바라보는 자세는 매우 조심스럽다. 한반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며, 남북관계의 장래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한 신중론을 펴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이 혹시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 및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치지 않도록 시종일관 주시하고 있다.⁷⁾

남북한이 통일되면 통일한국은 일본을 지역 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일본도 또한 남한이 통일시 북한의 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고수하려 할 지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이다. 통일한국이 남한의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형성해 결국 일본의 우려를 자아내게 되고 한국과 일본이 지역 내에서 세력경쟁을 하게되면 미국은 두 동맹국 사이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해 두 동맹국을 견제,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내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일 국교정상화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우선 현재의 고이즈미 정권 구도 하에서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며, 부시 정권의 미일동맹 증시도 일본의 적극적인 행동을 자제시킬 수 있다.

7) 대다수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한국인들 사이에는 인식돼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서도 일본 지식인층의 '통일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한 데 따르면 이 세미나에서 도쿄(東京)대 이노구치 다카시(猪口孝)교수는 향후 20-25년 사이에 남북한이 통일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통일 한반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취할 대책을 제안하는 형식을 통해 실제로는 '통일 한반도'에 대한 걱정을 내비쳤다. 이노구치 교수는 우선 남북한이 연방이든 연합 형태든 통일은 예정된 수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통일을 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노구치 교수는 "(일본 정부가) 남북한 통일을 환영하기는 할 것이지만 미군이 평화유지군의 형태로 계속 주둔을 보장받는 선에서 환영할 것"이라면서 "남한측이 미군 주둔에 동의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 통합에 대해 환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전제로 한 한반도 통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일 한반도가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남북한 통일을 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든 어떤 형태든 '통일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운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커져 일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 계속 주둔과 자본주의 체제를 전제로 한 남북한 통일, 즉 일본측에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일본 정부가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기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경우 반대한다는 것을 달리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노구치 교수 역시 '통일 한반도'가 일본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일 한반도'가 러시아와 중국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을 무엇보다 경계했다. 지금은 북한이 중간에서 차단하는 바람에 러시아, 중국과 분리돼 있지만 남북한이 통일되면 대륙, 즉 러시아와 중국과 근접하게 되고 러침중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대륙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싱가포르, 일본과 한국 간에 각각 추진 중인 자유무역 협정을 비교해 '대륙국가 통일 한반도'의 일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소비국', 일본은 '생산국'으로서 역할 분담을 전제로 일본참싱가포르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참일 간에도 자유무역협정이 "오랫 동안 협상 중"이라고 설명한 뒤 한참일 간에 중국이 끼어들 경우 일본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한참일 자유무역보다도 중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이 자유무역 협정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참일 간의 관계도 소비국, 생산국의 역할 설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통일 한반도'는 대륙국가로서 중국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일본의 이익이 침해받게 되므로 한반도 통일이 걱정스럽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노구치 교수는 "한참일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이 한국 시장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인데 중국이 포함된다면 것은 일본에게는 매우 어렵게 된다"면서 "따라서 일본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일본측 구도를 흐트러뜨리는 '통일 한반도'의 앞날을 걱정했다. 겉으로는 통일을 환영한다면서도 속으로는 반대하는 일본 지식인층의 대(對) 한반도 인식의 단면을 볼 수 있다. 2001년 4월 21일자 문화일보.